광역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실태와 고도화 과제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6 대한민국 탄소포럼 세미나 | 2026.11.23.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왕혜진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



목 차

CONTENTS

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Ⅱ • 광역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 현황

Ⅲ • 인천광역시 예산제도 운영 현황

Ⅳ • 광역 지자체 예산제도 고도화 과제

0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의 및 목적

정의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

목적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효과를 높임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출처: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01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의 예산편성·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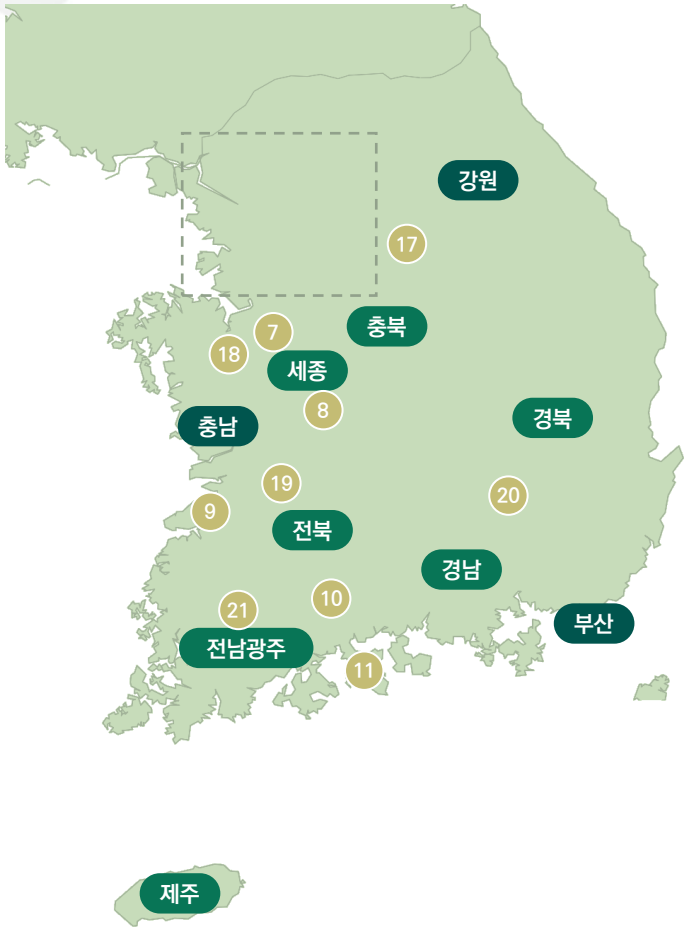
›

02
감축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03
재정 운용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제고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조례 제정 현황





광역 운영 조례 제정
광역 운영 조례 미제정
광역 제정 예정
n 기초 지자체 (오른쪽 번호)

광역 지자체 13곳

운영 조례 제정 (5) 서울특별시(기후예산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 부산광역시

운영 조례 미제정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정 예정 (1) 인천광역시

기초 지자체 21곳

1 파주시	8 대전 대덕구	15 하남시
2 서울 은평구	9 부안군	16 양평군
3 광명시	10 구례군	17 원주시
4 성남시	11 여수시	18 예산군
5 용인시	12 포천시	19 완주군
6 오산시	13 서울 노원구	20 대구 달서구
7 천안시	14 과천시	21 광주 남구

※ 운영 조례 미제정: 예산제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가 없는 지자체 | 기초 위치: 시·군·구청 기준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Ⅱ

광역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광역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현황 개요

검토 대상 | 예산서를 공개한 3개 광역 지자체

서울	2023 · 2024 · 2025 · 2026
경기	2026
경남	2023 · 2025 · 2026

검토 내용

지자체별 현황 (서울 · 경기 · 경남, 연도별)

3개 지자체 공통 비교 (2026)

01 예산 규모

연도별 · 유형별
사업 수와 예산액

02 실·국 분포

사업 수 · 예산액
상위 5개 실·국

03 유형 구성

주요 실·국의
사업유형별 사업 수

04 공통 비교

유형 비중 · 사업 규모
감축효과 기재

※ 예산서에 공개된 사업 단위 자료를 유형·실국·규모별로 집계한 기술적 현황이며, 지자체 간 작성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 유의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개요

2021년 시범운영 | **2023 회계연도부터 시행**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총괄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전략팀 | **지원기관** 서울탄소중립지원센터 | **대상** 세부사업 10억 원 이상(예외 포함)

유형	정의	사업 예시 (2026년 예산 상위)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화석연료 소비 감소, 친환경연료 전환, 온실가스 흡수·제거)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3,275억 · 기후동행카드 운영 1,489억 · 전기차 보급 1,321억
배출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화석연료·에너지 이용 증가, 온실가스 흡수원 제거)	·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066억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496억 · 양재대로 구조개선 417억
혼합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 (건물·시설 증축 + 감축사업, 도로 건설 + 감축사업 등)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345억 ·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1,120억 · 저상버스 도입 514억
중립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정보 부족 등으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	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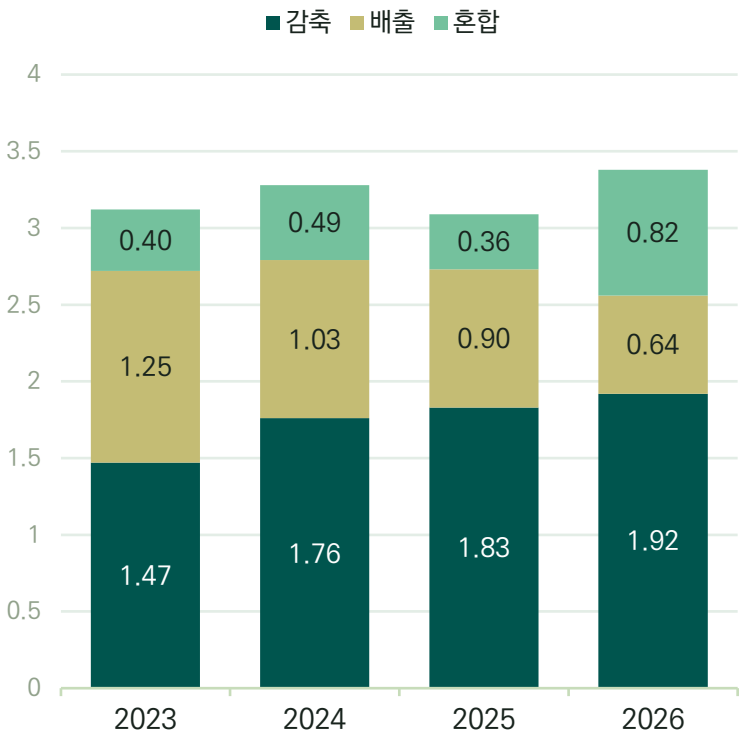
추가 태깅 **회계유형**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배출부문** 건물/시설·교통/도로·에너지·숲/공원·폐기물·기타 | **배출유형** 건물/시설 신축·재건축·증축, 냉난방비 지원, 일반차량 교체확대, 유류비 지원, 산림녹지 감소 등

자료: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서(기후예산 사업분류별 정의, 사업별 총괄표) | 대상 예외: 10억 원 미만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다년도·전년도 기후예산·기본계획 감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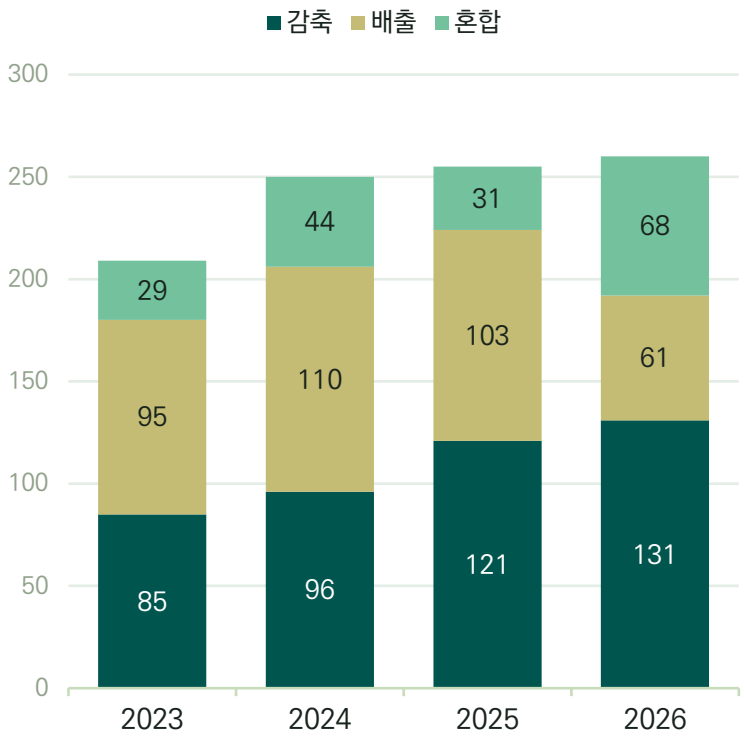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기후예산 총괄

2023–2026 회계연도 | 사업 수 209 → 260개, 감축 예산 비중 47% → 57%

총 예산액 단위: 조 원



총 사업 수 단위: 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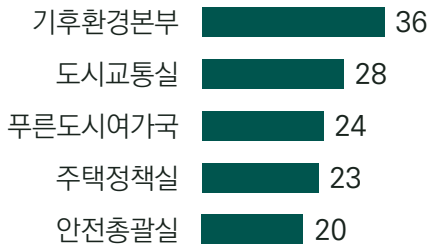
- **총 예산액** 2023~2026년 3조 원대 유지
- **사업 수** 2023년 209개 → 2026년 260개
- **감축 비중** 예산 기준 2023년 47% → 2026년 57%
- **배출 비중** 예산 기준 2023년 40% → 2026년 19%
- **혼합** 2025년 31개 → 2026년 68개

자료: 서울특별시 각 연도 기후예산서 사업유형별 총괄표 | 2023년은 2024년 예산서의 전년도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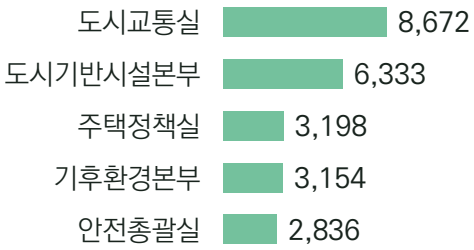
서울 실·국별 사업 수·예산액 TOP 5

2023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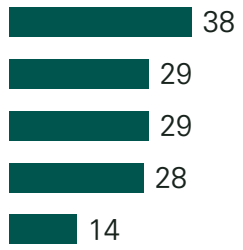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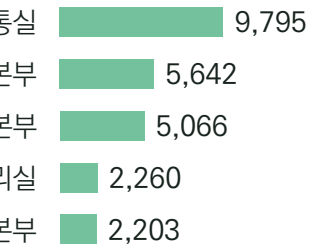


2024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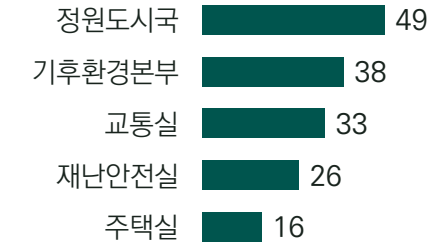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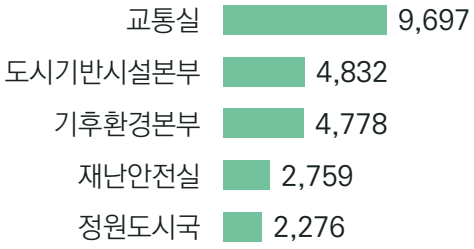


2025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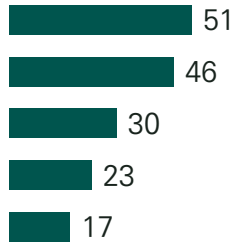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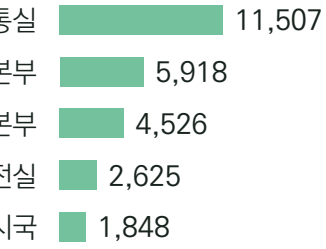


2026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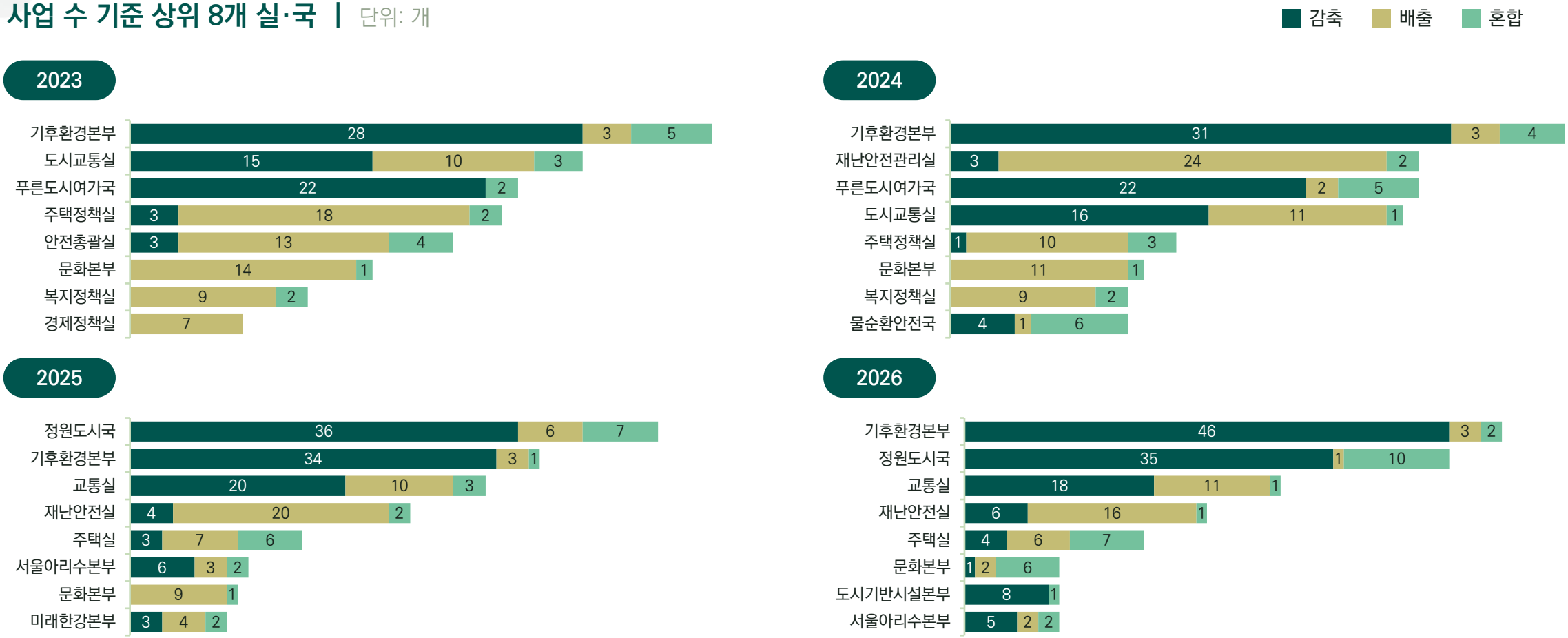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자료: 서울특별시 각 연도 기후예산서 조직별 총괄표 | 조직 개편에 따라 연도별 실·국 명칭이 다름

서울 주요 실·국의 사업유형별 건수

사업 수 기준 상위 8개 실·국 | 단위: 개



자료: 서울특별시 각 연도 기후예산서 사업별 총괄표(2023년은 목차)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요

2020 · 2023년 시범운영 | **2024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 | **2023년 광역 최초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총괄부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 **지원기관** 경기연구원·경기탄소중립지원센터 | **대상** 자본지출 5억 원 이상 + 기본계획 과제

유형	정의	사업 예시 (2026년 예산 상위)
감축	온실가스 직접 감축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책 연관성이 높은 사업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204억**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963억** · The 경기패스 **2,239억**
배출	화석연료 사용 및 개발행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하수처리장 설치 **1,905억**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04억** ·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전환) **203억**
복합영향	배출과 감축이 모두 포함되어 영향이 복합적이거나 기술 적용·사업 방향에 따라 감축 또는 배출 영향이 있는 사업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접경지역 지원) **565억** · 지역균형발전사업 **391억**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277억**
중립	온실가스 배출 또는 감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재한 사업	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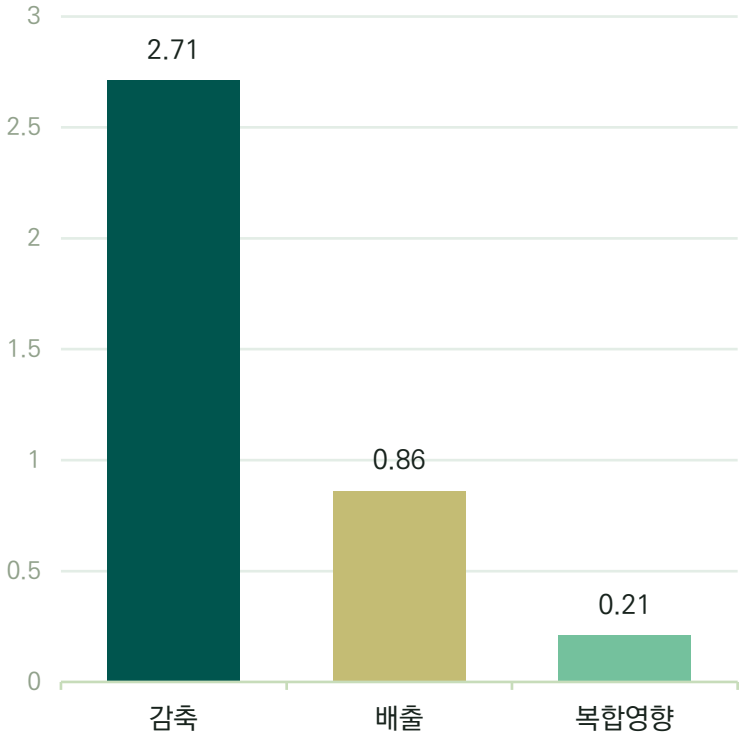
정책사업유형 물리적 인프라 · 기술·정책 지원 및 기반 구축 · 교육·홍보 및 민간역량 강화 | **유형 판단 기준** 사업 시행·완공 후 운영 단계의 배출 증가(+) · 저감(–) · 혼재 여부

자료: 2026 회계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예산 유형 구분, 사업별 예산서) | 사업명의 재원 표기(국비/직접 등)는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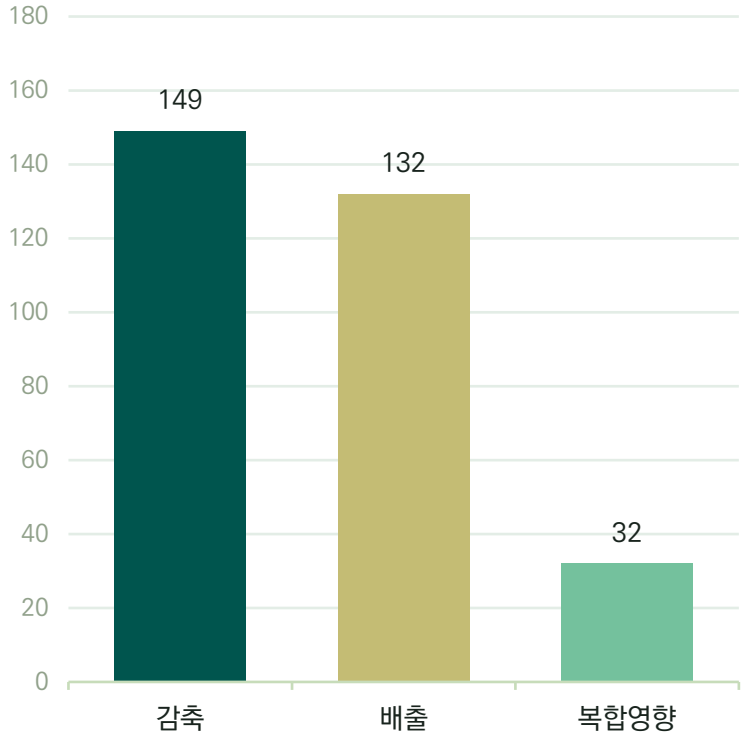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총괄

2026 회계연도 | 총 3.78조 원, 313개 사업

총 예산액 단위: 조 원



총 사업 수 단위: 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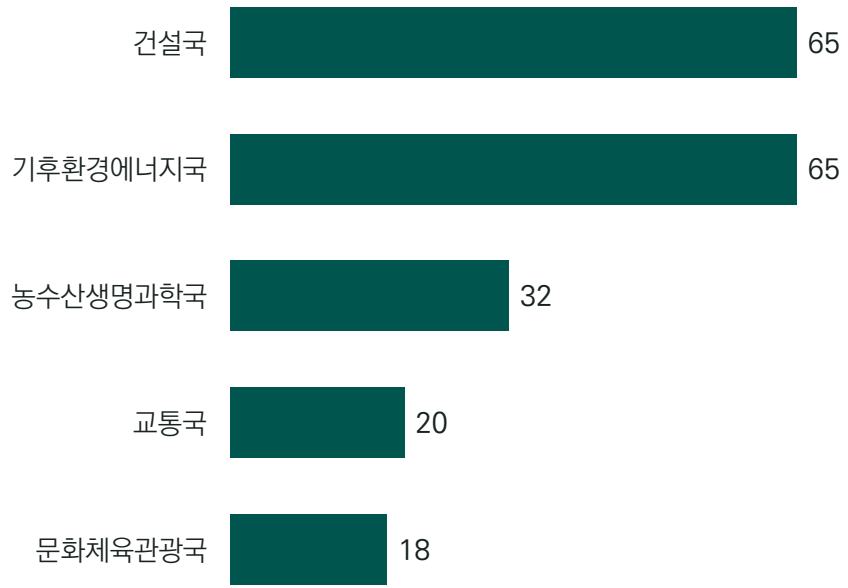
- **예산 기준** 감축 71.7% · 배출 22.8% 복합영향 5.6%
- **사업 수 기준** 감축 47.6% · 배출 42.2% 복합영향 10.2%
- **교통국 집중** 예산 1.48조 원으로 전체의 약 39%
- **건설국 배출** 배출사업 132개 중 55개(41.7%)

※ 집계 기준(예산액·사업 수)에 따라 유형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남 | 자료: 2026 회계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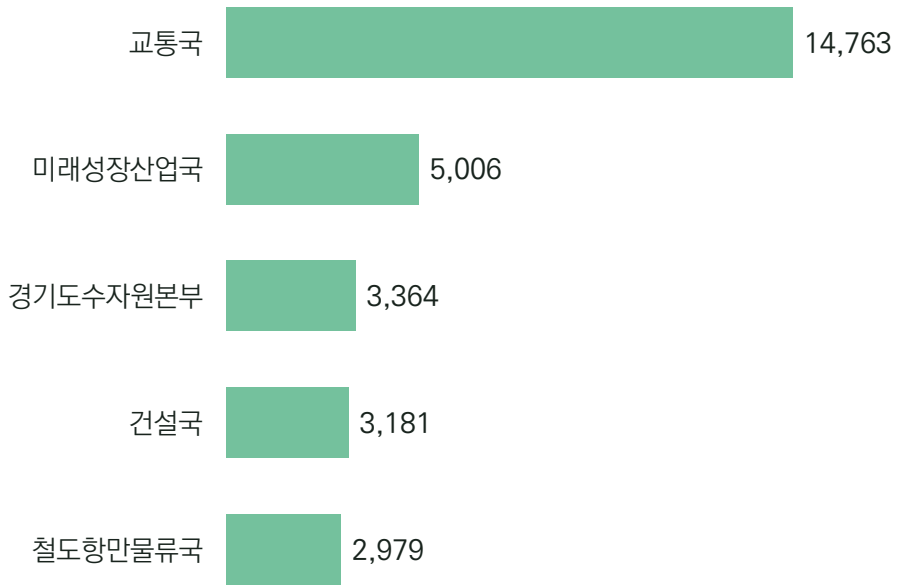
경기도 실·국별 사업 수·예산액 TOP 5

2026 회계연도

사업 수 TOP 5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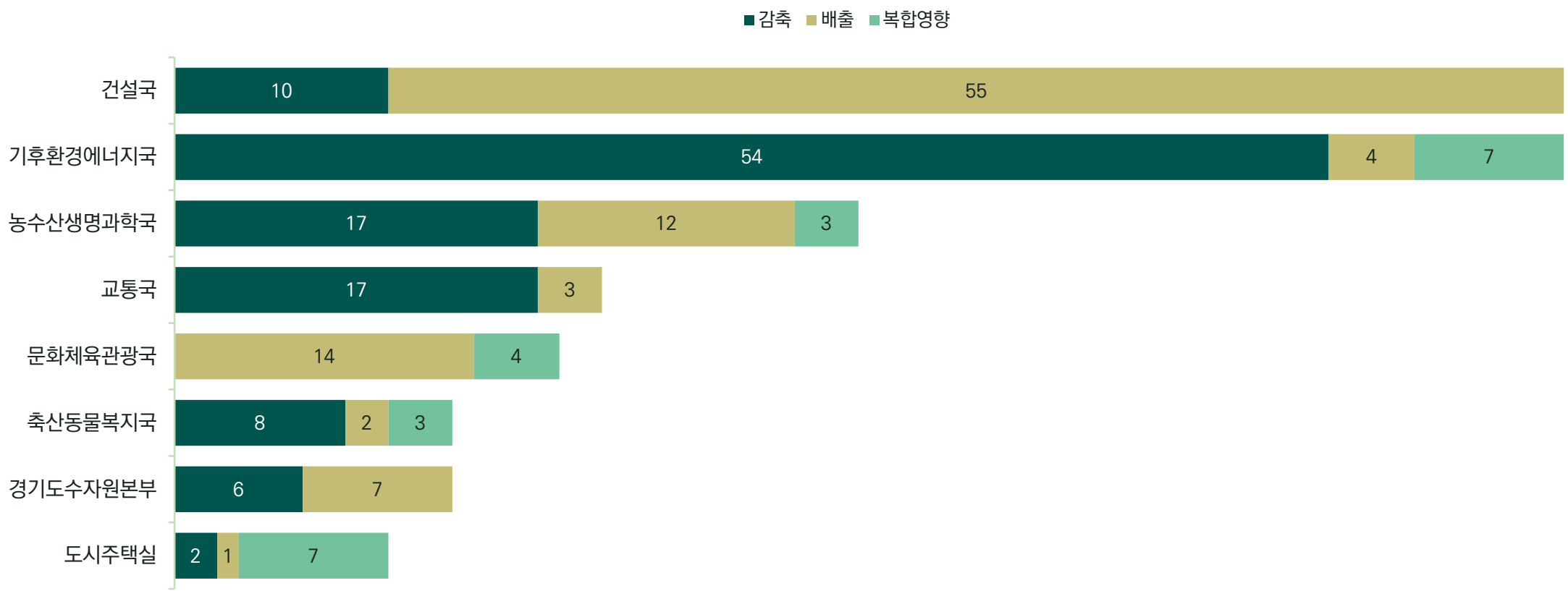
예산액 TOP 5 (억 원)



자료: 2026 회계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실·국별 총괄표

경기도 주요 실·국의 사업유형별 건수

2026 회계연도 | 사업 수 기준 상위 실·국 | 단위: 개



※ 8위는 도시주택실·철도항만물류국·소방재난본부·소방서가 각 10개로 동률(도시주택실 표시) | 자료: 2026 회계연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경상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개요

2023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총괄부서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지원기관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외부 실무검토반

대상 모든 실·국 (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비 제외)

유형	정의	사업 예시 (2026년 예산 상위)
기후친화 기후정책	경남 기후·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39억 · 전기자동차 보급 1,115억
기후친화 부분감축	예산의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21억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99억
기후부정영향	사업 시행의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78억 · 공영주차장 조성(전환) 249억
기후잠재영향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업	· 농촌공간정비사업 596억 ·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66억
기후중립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이 거의 없거나 기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예산서 예시: 주거급여, 생계급여, 둘레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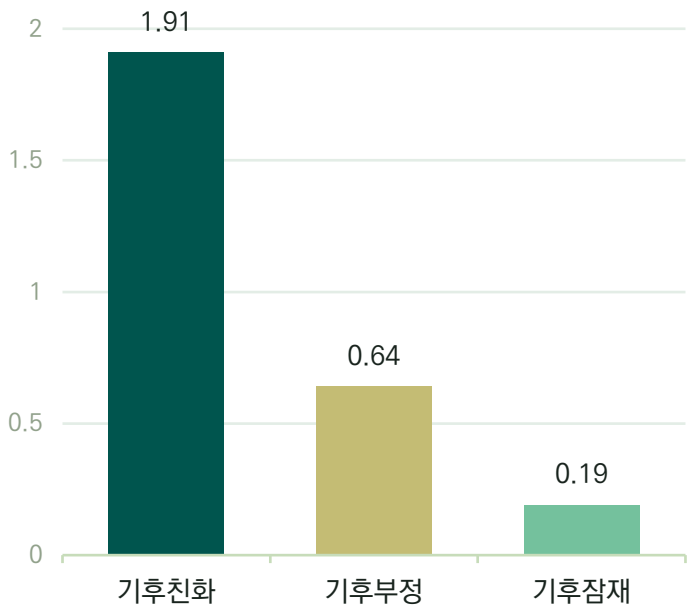
부문 행정기능 분류(지방재정 기능별 분야) 기준 —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등

자료: 2025 경상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세부 분석자료(유형 정의), 2026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사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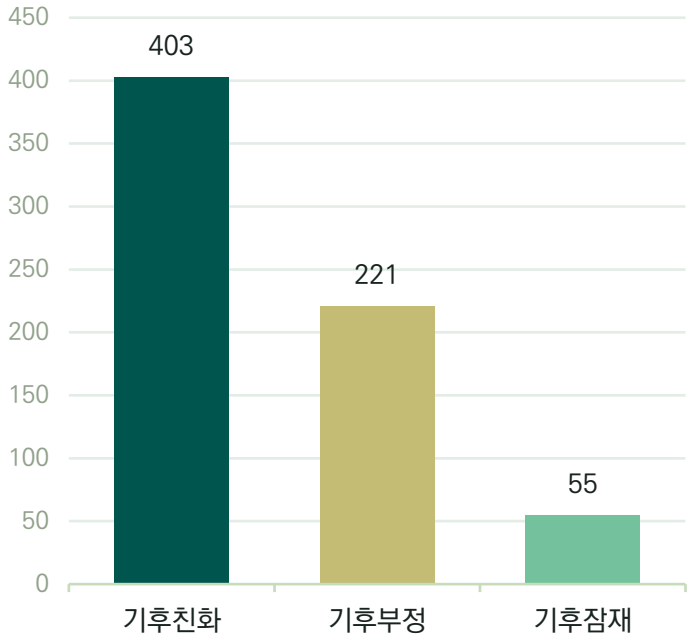
경상남도 202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총괄

기후중립 제외 | 합계 2.74조 원, 679개 사업

총 예산액 단위: 조 원



총 사업 수 단위: 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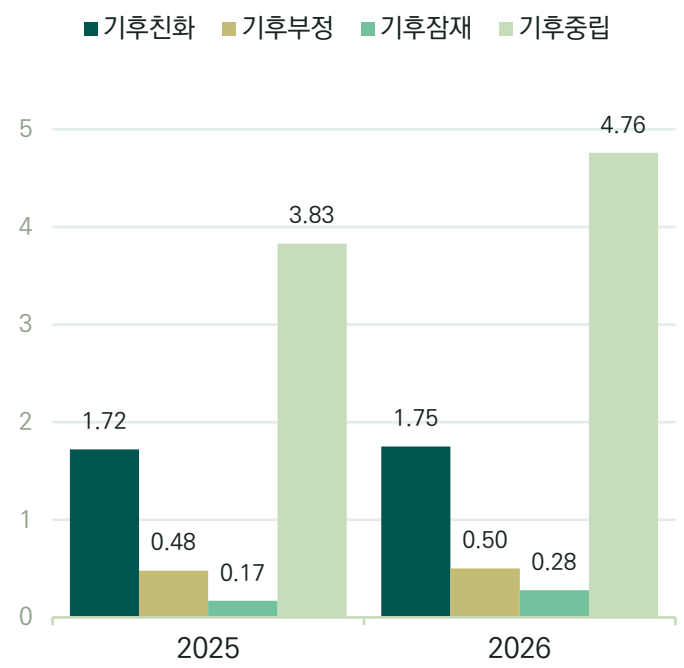
- **총 예산액** 2.74조 원 (기후중립 제외)
- **사업 수** 679개
- **친화 비중** 예산 기준 70% (1.91조 원)
- **부정 비중** 예산 기준 23% (0.64조 원)
- **사업 수 기준** 기후친화 59% (403개)

※ 2023년은 기후중립사업 제외 | 2025-2026년과 직접 비교 시 분류체계 및 집계범위 차이 유의 | 자료: 2023 경상남도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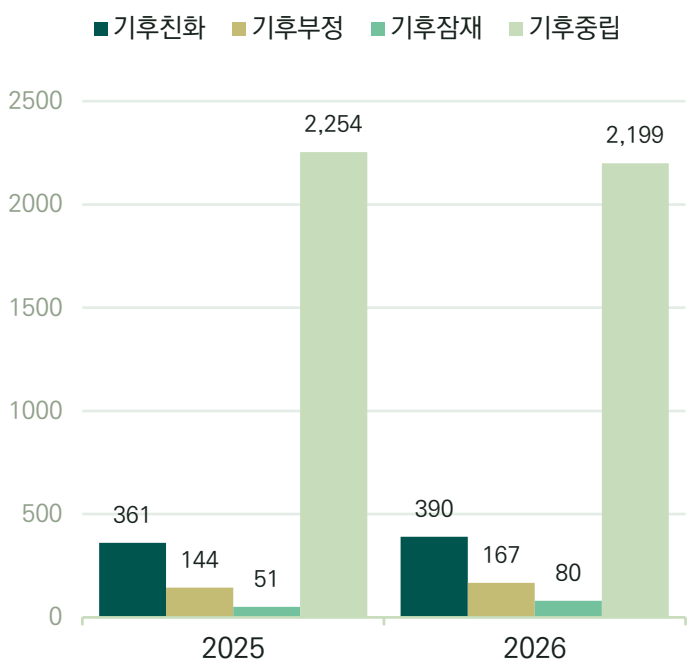
경상남도 2025–202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총괄

기후중립 포함 | 예산 6.19조 → 7.29조 원, 사업 2,810 → 2,836개

총 예산액 단위: 조 원



총 사업 수 단위: 개



주요 특징

- **총 예산액** 2025년 6.19조 원 → 2026년 7.29조 원
- **사업 수** 2025년 2,810개 → 2026년 2,836개
- **중립 비중** 예산 기준 2025년 62% → 2026년 65%
- **친화 비중** 예산 기준 2025년 28% → 2026년 24%
- **기후잠재** 사업 수 2025년 51개 → 2026년 8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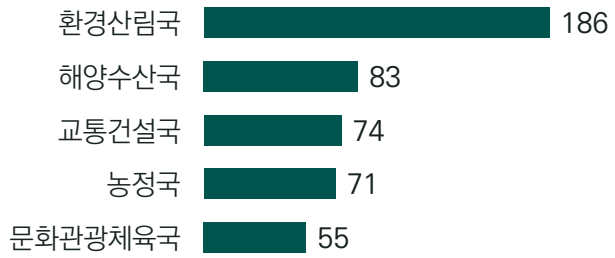
※ 유형별 예산액은 반올림 수치 | 자료: 2025 경상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세부 분석자료,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분석, 2026 유형별 예산서

경상남도 실·국별 사업 수·예산액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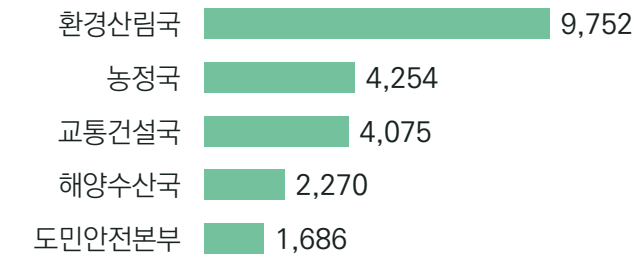
예산액 TOP 5 | 환경산림국 · 교통건설국 · 농정국 · 도민안전본부는 3개 연도 모두 포함

2023 기후중립 제외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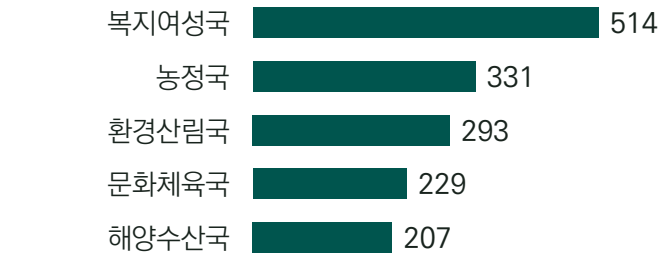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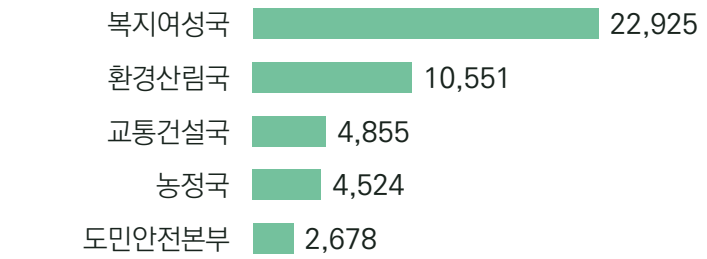


2025 기후중립 포함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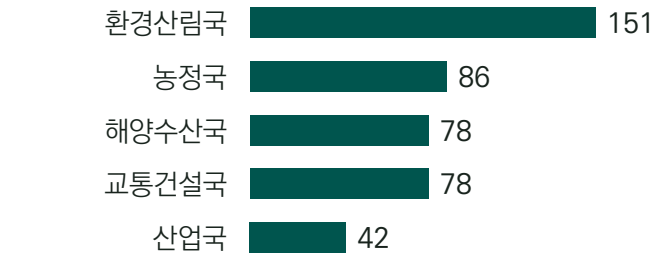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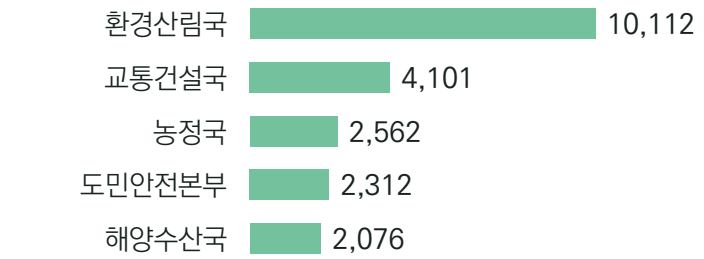


2026 기후중립 제외

사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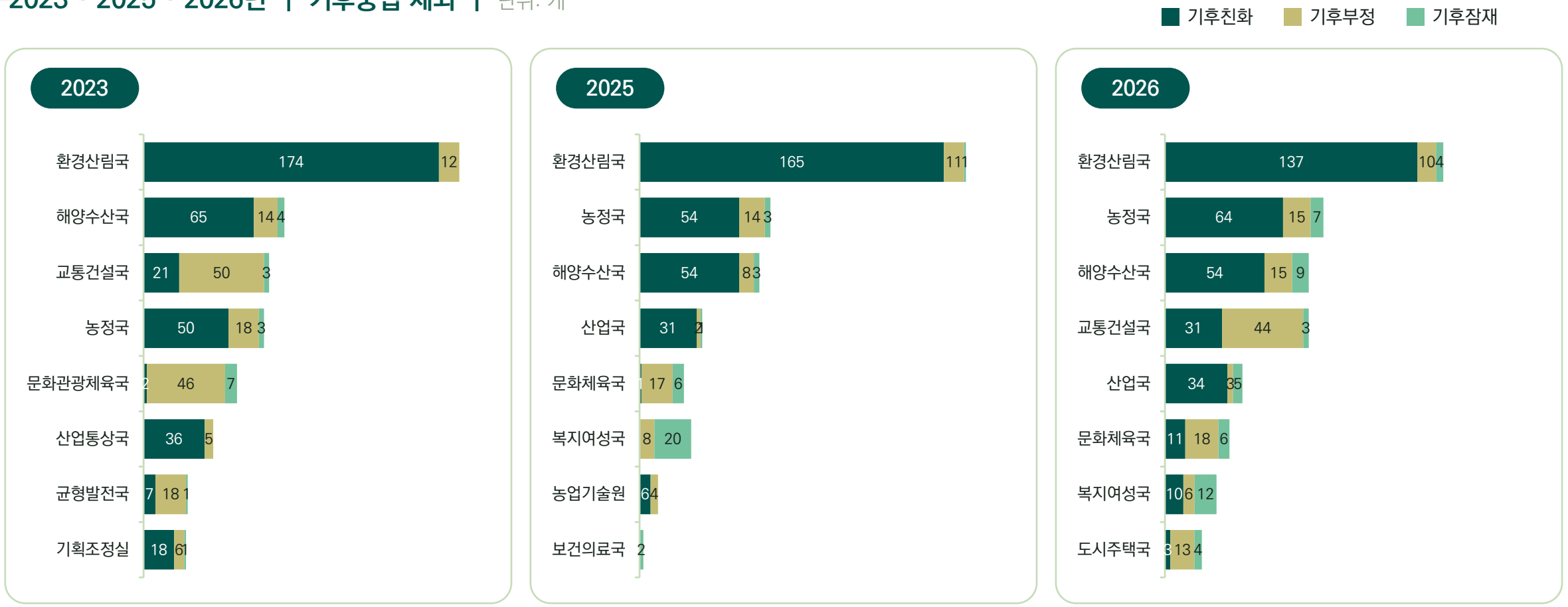
예산액 (억 원)



※ 경남 예산서는 과 단위만 표시 → 각 연도 예산 편성 당시 조직(경남도 인사발령 명단 기준)에 맞춰 발표자가 실·국으로 재분류, 직속기관·사업소는 소관 실·국에 포함 | 2025년은 세부 분석자료의 실·국별 집계

경상남도 주요 실·국의 사업유형별 구성

2023 · 2025 · 2026년 | 기후중립 제외 | 단위: 개



※ 실·국별 사업 수(기후중립 제외) 상위 8개, 2023·2026년은 과 단위 자료를 편성 당시 조직 기준으로 발표자가 재분류(2023년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 소관) | 2025년 기후중립 사업 수(별도, 위에서부터): 486 · 260 · 142 · 148 · 205 · 169 · 132 · 116개 | 자료: 2023·2026 경상남도 유형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2025 세부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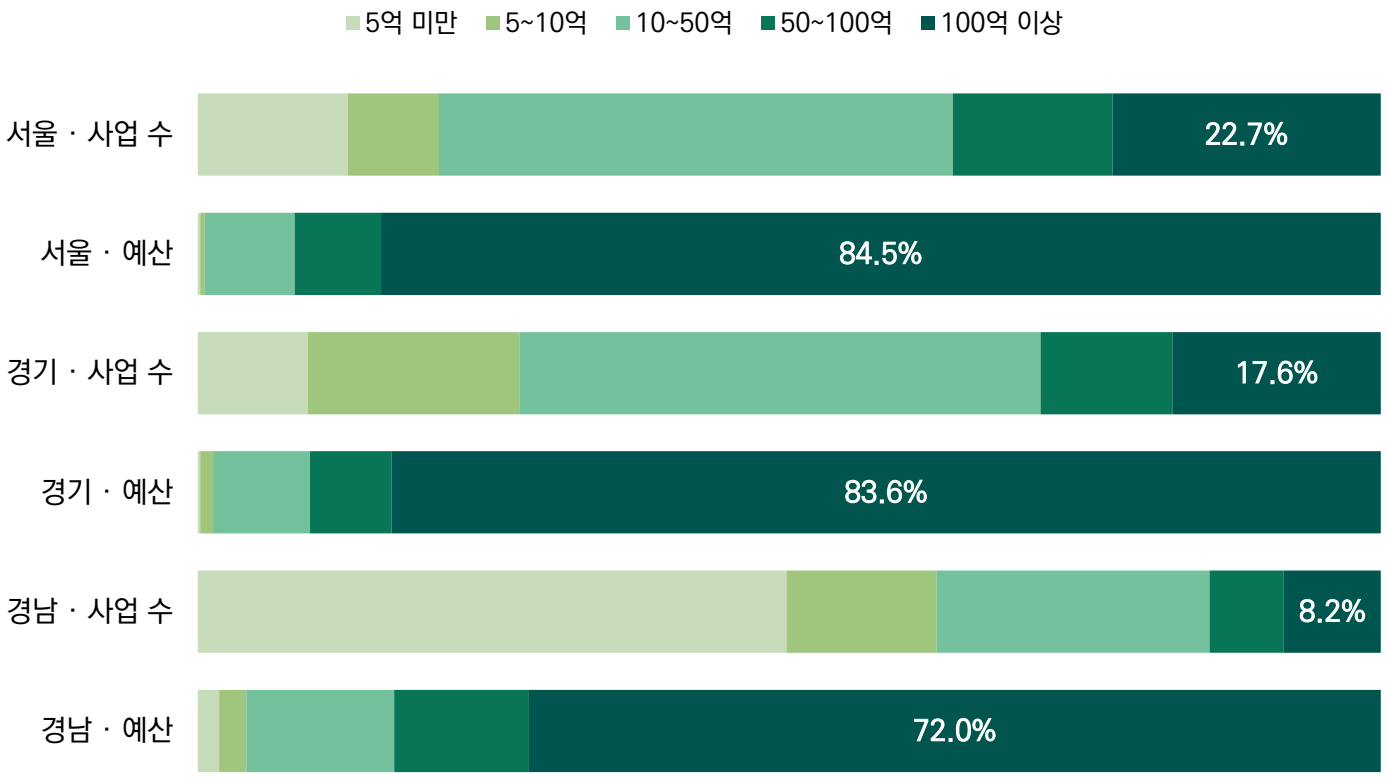
3개 광역 지자체 2026 회계연도 예산서 비교

구분	서울	경기	경상남도 (비중: 중립 제외)
작성 대상	세부사업 10억 원 이상 (다년도·기본계획 사업 등 예외 포함)	자본지출 5억 원 이상 + 기본계획 과제	모든 실·국 (행정운영경비 등 제외)
총 예산액	3.37조 원	3.78조 원	2.53조 원 (중립 제외) 7.29조 원 (전체)
총 사업 수	260개	313개	637개 (중립 제외) 2,836개 (전체)
감축(친화) 예산 비중	**56.7%**	**71.7%**	**69.2% (중립 포함 시 24.0%)**
배출(부정) 예산 비중	19.0%	22.8%	19.8%
혼합·복합·잠재 예산 비중	24.3%	5.6%	11.1%
감축(친화) 사업 수 비중	50.4%	47.6%	61.2%
회계 구조 (예산 비중)	일반 22.7% · 특별 76.1% · 기금 1.2%	일반 92.5% · 특별 7.1% · 기금 0.3%	일반 98.2% · 특별 1.8%
신규 사업 비중 (사업 수 · 예산)	11.9% · 1.7%	13.9% · 4.1%	20.9% · 8.3%

※ 각 지자체 2026 회계연도 예산서 기준, 비중은 발표자 집계(반올림) | 유형 명칭: 서울 감축·배출·혼합 / 경기 감축·배출·복합영향 / 경남 기후친화·기후부정·기후잠재 | 신규 = 전년도 예산이 없는 사업(서울은 사업 페이지 표기, 경기·경남은 전년 예산 칸 기준) | 경남 회계 구조는 중립 제외 기준 | 작성 대상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에 유의

예산은 소수 대형 사업에 집중

2026 회계연도 | 100억 원 이상 사업이 사업 수로는 8~23%, 예산으로는 72~85%를 차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 수

서울	경기	경남
13개	8개	22개
전체 260개 중	전체 313개 중	전체 637개 중

감축 예산 중 상위 5개 사업 비중

서울	경기	경남
50%	53%	29%

서울·경기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버스 준공영제, 전기차 등 교통 사업 몇 개에 감축 예산의 절반이 몰림

자료: 각 지자체 2026 회계연도 예산서 사업별 자료 재집계. 서울은 10억 원 미만이라도 다년도·전년도 기후예산·기본계획 감축사업은 작성 대상, 경기는 기본계획 과제 포함. 경기 분포는 예산서 총괄표 기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업 목록

2026 회계연도 |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

● 감축(친화) ● 배출(부정) ● 혼합·복합·잠재 ★ 감축 예산 상위 5

서울

상위 13개 / 전체 260개 단위: 억 원

1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	3,275
2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	2,143
3	**기후동행카드 운영 ★**	1,489
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345
5	**전기차 보급 ★**	1,321
6	**광역철도(GTX 등) 건설비 부담 ★**	1,304
7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양천, 노원, 강남, 마포)	1,120
8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066
9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961
10	장애인콜택시 운영	830
11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792
12	공공주택 건설, 공공주택 건설(통합공공임대주택)	790
13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726

경기

상위 8개 / 전체 313개 단위: 억 원

1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	4,204
2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	3,120
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	2,963
4	**The 경기패스 ★**	2,239
5	하수처리장 설치	1,905
6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	1,816
7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772
8	옥정-포천 광역철도	1,300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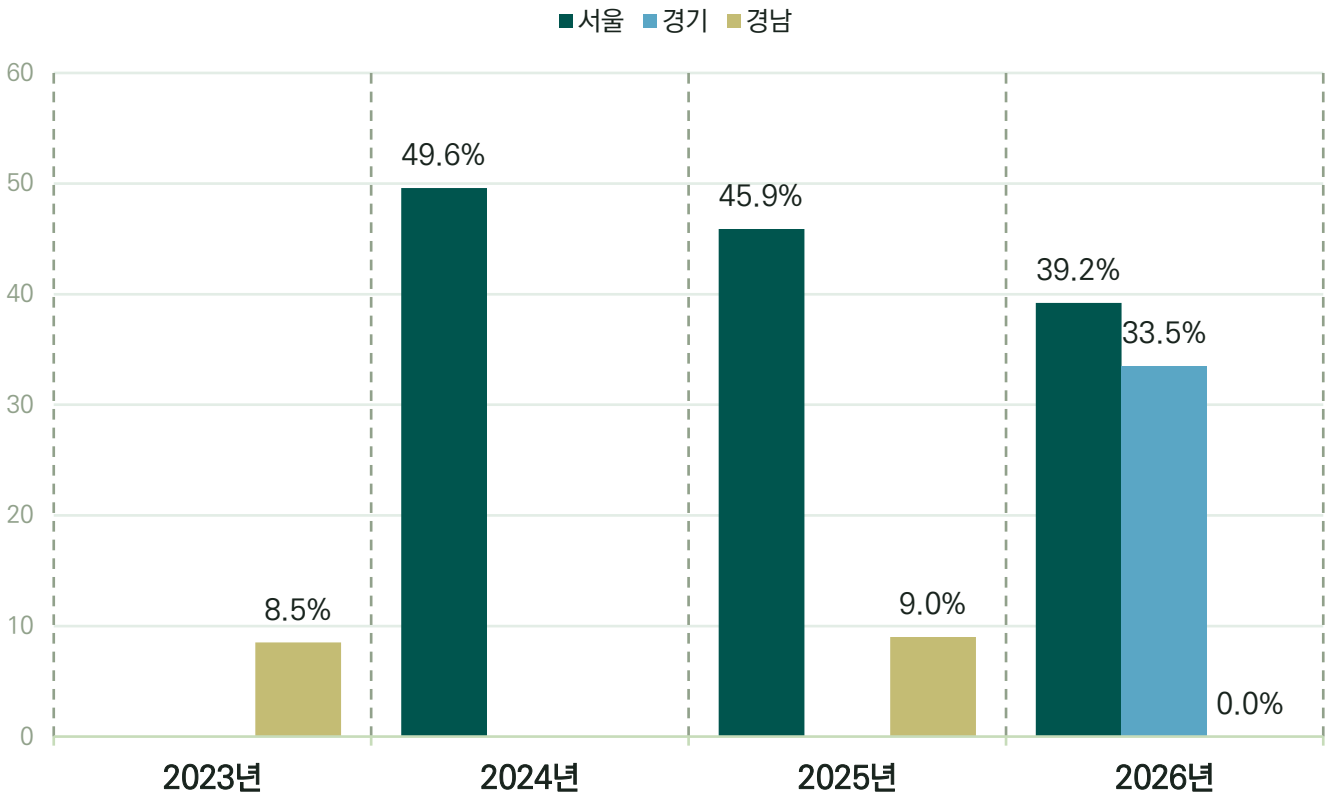
상위 22개 / 전체 637개 단위: 억 원

1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	1,239
2	**전기자동차 보급 ★**	1,115
3	**재해위험지구 정비(직접) ★**	1,002
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	955
5	**하천재해예방 사업(전환) ★**	811
6	배수개선(농어촌공사 관리)	636
7	풍수해생활권 정비(지원)	596
8	농촌공간정비사업	596
9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 대응)	530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전환)	509
11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로 정비)	491
12	도시재생사업	484
	13~22위 10개 사업 합계	3,754

자료: 각 지자체 2026 회계연도 예산서 사업별 자료 재집계(서울 사업별 총괄표, 경기 사업별 예산서, 경남 유형별 예산서·기후중립 제외) | 경남은 상위 22개 중 12개 표시 | 경기 사업명의 재원 표기 생략

감축효과 정량 산정은 감소

정량 감축량을 산정한 사업 비율 | 서울 50% → 39%, 경남 9% → 0%



1 감축효과 "향후반영" 사업 급증

서울 28건 → 46건 → 83건 (2024→2026)

2027년 이후 감축이 발생하는 다년도 사업(시기 미도래)이 늘며 정량 산정 비율 감소

2 감축량은 소수 사업에 쏠림

서울 상위 3개 사업 63% 경기 1개 사업 30%

서울 에코마일리지 등 3개 사업이 81만 톤 중 51만 톤, 경기 기후행동 기회소득 1건이 99만 톤 중 30만 톤

3 경남: 감축량 산정 근거 보완 여지

2026 '계량' 표시 45건, 감축량 기재 0건

2023년 1개 사업(보일러 1대당 37.4톤 적용, 68.5만 톤)이 정량 감축량의 54% — 원단위 점검 시 정확도 향상 기대

자료: 각 지자체 예산서 사업별 자료 재집계. 정량 산정 = 감축량(tCO2) 수치가 기재된 사업. 경기는 예산서 총괄(313건 중 105건) 기준. 서울은 2023년 사업별 총괄표가 없어 2024년부터 비교

Ⅲ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인천광역시 예산제도 추진 경과 및 법적 근거

제도 추진 경과

202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

2022.11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2023
2023 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2026
2027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중

법적 근거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6조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2023 회계연도부터 운영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총괄부서	기후에너지국 기후대응정책과	**지원기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사업부서**	기후에너지국, 환경국 및 유관부서

사업유형

예산서 작성 대상 (감축 · 약감축)

태깅유형

감축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약감축	온실가스 감축, 배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감축 영향이 더 큰 사업 또는 단기적으로는 배출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감축 영향 비중이 높은 사업
중립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에 영향이 없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사업
약배출	약감축사업처럼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나 배출 영향이 더 큰 사업 또는 단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더 큰 사업
배출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되는 사업

감축정책유형: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 국제감축, 기타

정책유형: 온실가스 감축, 연구 및 기술개발, 정책적 지원

운영현황

- 기후에너지국·환경국 등 주요부서와 유관부서 대상 운영
- 사업 수와 참여 부서 수는 점진적 증가, 총예산액은 연도별 변동
- 조례 제정 후 점진적 확대를 거쳐 전면시행 예정
- 약감축사업이 감축사업보다 많으며, 대상사업 선정 시 기본계획 사업 최우선 고려
-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 비중이 높으며, 정량사업보다 정성사업이 더 많음

주요 광역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비교

구분	서울 (기후예산제)	경기 (前 탄소인지예산)	경남 (前 기후인지예산)	인천
목표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보호, 생물다양성 등	온실가스 감축
시행시기	2023 회계연도 (2021년 시범운영)	2024 회계연도 (2020, 2023 시범운영)	2023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부터 운영
운영 근거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주무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전략팀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기후에너지국 기후대응정책과
지원기관	서울탄소중립지원센터	경기연구원 / 경기탄소중립지원센터	경상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대상부서	본청·전체 사업소 (10억 원 이상)	모든 실·국 (5억 원 이상)	모든 실·국	기후에너지국·환경국 및 유관부서
사업유형	감축, 배출, 혼합, 중립	감축, 배출, 복합영향, 중립	기후친화, 기후부정, 기후잠재, 기후중립	감축, 약감축, 중립, 약배출, 배출
기본계획 연계 (예산서 표시)	O (사업별 해당 여부 표시)	O (기본계획 관리 사업 표시)	△ (예산서 표시 항목 없음)	O (사업별 해당 여부·관리번호 표시)

※ 기본계획 연계: 서울은 2025 회계연도부터 사업별 표시, 경기는 "기본계획 관리 사업" 표시, 경남 예산서는 해당 항목 없음, 인천은 사업별 해당 여부와 관리번호 표시 | 경기·경남 예산서는 중립사업 작성 제외 | 자료: 각 지자체 조례 및 예산서

Ⅳ

광역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고도화 과제

광역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고도화 과제

과제	현황 및 검토 결과	개선 방향
1 법적 근거 강화	광역 13곳 중 운영 조례 제정은 5곳(서울은 기후예산제), 인천은 기본조례 조항에 근거해 운영	운영 조례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제도 운영 운영체계·참여 부서/기관 역할 명확화, 결산서 작성
2 대상사업 범위·작성 기준 정립	작성 대상(10억·5억 원·전 사업)과 유형 명칭이 지자체마다 다름, 감축·배출사업까지 포함해야 제도 취지 실현	공통 최소 기준(대상·유형 정의) 마련 전면시행 또는 주요 감축사업 집중 운영 검토
3 기본계획과의 연계	1차 기본계획(2024년 수립) 이후 신규·종결사업 등 변화 발생, 현장에서는 중복 업무로 인식	기본계획과 예산제를 연계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4 사업 규모를 고려한 효율적 관리	100억 원 이상 사업이 예산의 72~85%를 차지해 예산이 소수 대형 사업에 집중되는 경우 존재	대형 사업은 감축효과를 중점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은 작성 부담 완화 방안 검토
5 감축효과 산정·근거 검증	정량 산정 비율 감소(서울 50%→39%, 경남 2026년 0건), 감축량이 소수 사업에 집중되고 원단위 오류 의심 사례 존재	다년도 사업 감축량 추정 기준·감축원단위 마련 산정 근거 기재 및 실무검토반 검증
6 유형 분류의 일관성 확보	서울은 같은 사업 185건 중 38건이 1년 새 유형 변경(경남 372건 중 6건), 하수도 사업은 경남 기후친화·경기 배출로 정반대 분류	분류 근거 기재, 지자체 간 공통 분류 기준 중립 판정 기준 및 목록 관리

인천 적용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도를 높이고,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여, 배출사업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

※ 중앙정부 지침과 지자체별 운영 여건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 필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실태와 고도화 과제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